

현안과 과제

| 2012년 예산의 특징과 잠재 위험요인

Executive Summary

□ 2012년 예산의 특징과 잠재 위협요인

■ 재정위기의 확산

포르투갈, 그리스, 이태리 등 남유럽 국가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미국, 일본 등 전세계로 확산되어 글로벌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기업 부채, 지방자치단체 부채 급속한 고령화 등 잠재적 위협요인이 많아 재정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2012년 예산의 특징과 문제점, 재정건전성의 잠재 위협요인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과제를 도출해 보았다.

■ 2012년 예산의 특징과 문제점

일자리와 맞춤형 복지를 양측으로 하는 2012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344.1조원으로, 아래와 같은 특징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5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2년 관리대상 수지는 -14.3조원으로 예상되어 2008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두 번의 선거와 복지 수요 증가로 2013년 건전재정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둘째, 낙관적 세수전망에 기반해 있다.**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내년도 국내외 경기가 부진하며, 국세수입 증가율이 계속 떨어져 오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2012년 9.5%의 세수 증가율은 다소 낙관적인 수치라고 판단된다. **셋째, 5년 평균 복지예산 증가율이 8.4%로서 예산증가율 평균 6.5%를 상회하고 있다.** 복지예산의 양적 팽창에 따라 질적인 제고와 서비스 효율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넷째, 일자리 예산의 효과가 제한적이다.** 2012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10.1조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지만,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은 2.5조원에 불과하며, 취업자 증가 추이가 1990년대 초반 50만명에서 최근 20만명 정도로 하락하여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다섯째, 국방예산의 높은 증가이다.** 지난 5년간 국방예산 증가율은 6.2%로서 참여정부의 8.4%보다는 낮지만, DJ정부의 3.5%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방위력개선투비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등 내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 재정건전성의 잠재 위협요인

우리나라의 재정은 단기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근 국가부채의 빠른 증가, 공기업 부채의 급증, 빠른 고령화라는 3가지 잠재 위협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2020년 이후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나빠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시사점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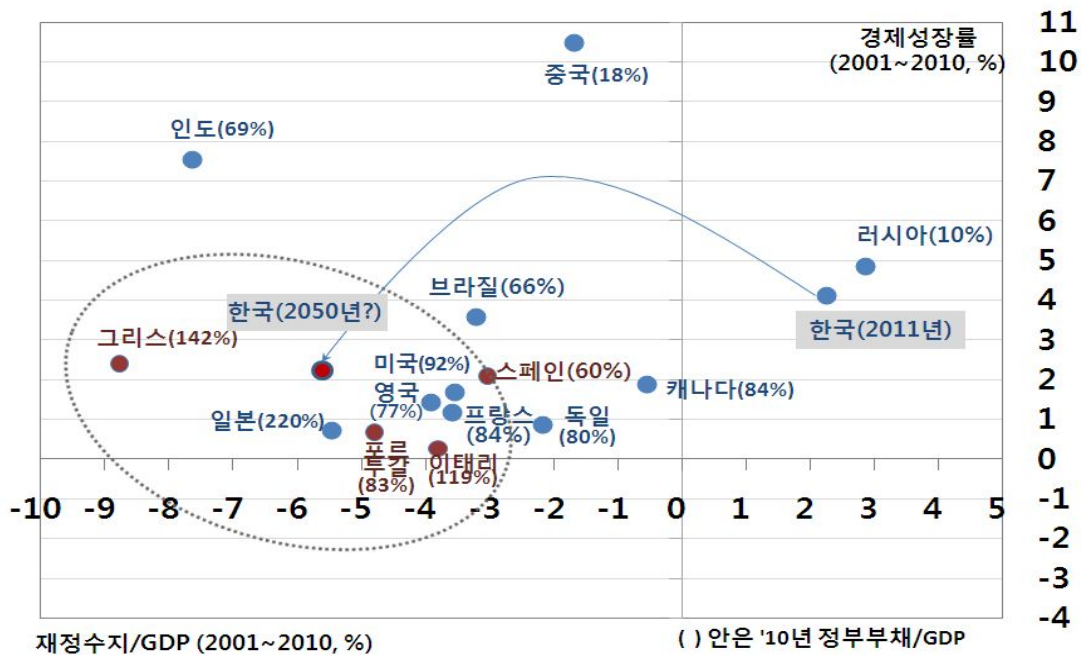
첫째, 재정수지 적자가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Pay-Go 원칙의 도입, 지속가능한 재정목표제 도입, 재정지표의 투명한 관리 등 재정규율의 강화가 요구된다. **둘째,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위해 재원조달 대책의 수립과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제고, 전달체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셋째, 방위력 증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방예산의 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

1. 재정위기의 확산

○ (재정위기의 확산)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미국, 일본 등 전 세계로 확산되어 글로벌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잠재적 위협요인이 많아 재정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포르투갈,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등 남유럽국가들의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 급증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최근 유럽의 중심국가인 프랑스¹⁾, 미국, 일본 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재정건전성을 문제로 삼아 S&P가 8월5일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고, 무디스도 8월23일 일본 신용등급을 하락시킴에 따라, 건전재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미국 국가부채의 GDP대비 비율은 올해 말 99.5%까지 높아질 전망
 - 일본의 국가부채는 6월말 현재 943조8,096억 원에 달하며, 올해 말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29%까지 높아질 전망
 - 한국은 2011년 현재 재정위기 고위험그룹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공기업 부채 증가, 급속한 고령화 등 잠재적 위협요인들이 많음

< 재정위기 고위험국가들 (低성장, 高부채, 高적자) >



자료: IMF, Economic outlook, 2011.

1) 프랑스 은행들의 부실채권 증가로 프랑스의 CDS프리미엄이 9월15일 현재 185bp까지 상승한 바 있음

2. 2012년 예산의 특징과 문제점

- (5년 연속 재정적자) 2012년 예산은 총지출 기준 344.1조 원으로서, 5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교육, 복지, R&D, 일반행정 예산이 크게 증가
- 관리대상수지는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예정이며, 총수입 증가율 9.5% 보다 낮은 5.5%의 총지출 증가율을 유지하는 재정준칙(fiscal rule)을 도입하여, 중기재정계획²⁾보다 1년 앞당겨진 2013년에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제시함
- 분야별 자원배분 내역을 보면, 교육, 복지, R&D 예산이 총지출 예산 증가율 (5.5%)을 상회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치루기 위해 일반 행정 예산도 크게 증가함

< 2012년 예산 및 분야별 내역 >

(단위: 조 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액 (B-A)	증감율 (B/A)
총 수 입	314.4	344.1	29.7	9.5
총 지 출	309.1	326.1	17.0	5.5
1. R & D	14.9	16.0	1.1	7.3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2	15.2	0.1	0.6
3. SOC (4대강 사업 제외時)	24.4 (21.4)	22.6 (22.3)	△1.8 (0.9)	△7.3 (4.5)
4. 농림·수산·식품	17.6	18.1	0.5	2.7
5. 보건·복지·노동	86.4	92.0	5.6	6.4
6. 교육 (지방교육교부금)	41.2 (35.3)	45.1 (38.5)	3.9 (3.2)	9.3 (9.1)
7. 문화·체육·관광	4.2	4.4	0.2	5.7
8. 환 경	5.8	6.1	0.3	6.3
9. 국 방	31.4	33.2	1.8	5.6
10. 외교·통일	3.7	3.9	0.2	8.1
11. 공공질서·안전	13.7	14.5	0.8	6.5
12. 일반공공행정 (지방교부세)	52.4 (30.2)	56.6 (33.1)	4.2 (2.9)	8.2 (9.5)

자료: 기획재정부

주: 지방이전채원(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지자체보조금): ('11) 95.9 → ('12) 102.7조원 (7.1% 증가)

2) 2010년 중기재정계획(2010~2014)에 따르면, 2014년에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

<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추이와 전망 >

(단위: 조 원, %)

연도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국가채무 (GDP비율)	111.2 (18.4)	299.2 (30.7)	309.0 (30.1)	359.6 (33.8)	392.8 (33.5)	435.5 (35.1)	448.2 (32.8)	460.0 (31.3)
재정수지 (GDP비율)	-6.0 (-1.0)	3.6 (0.4)	-15.6 (-1.5)	-43.2 (-4.1)	-13.0 (-1.1)	-25.0 (-2.0)	-14.3 (-1.0)	0.2 (0.0)

자료: 기획재정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1.9.27

주: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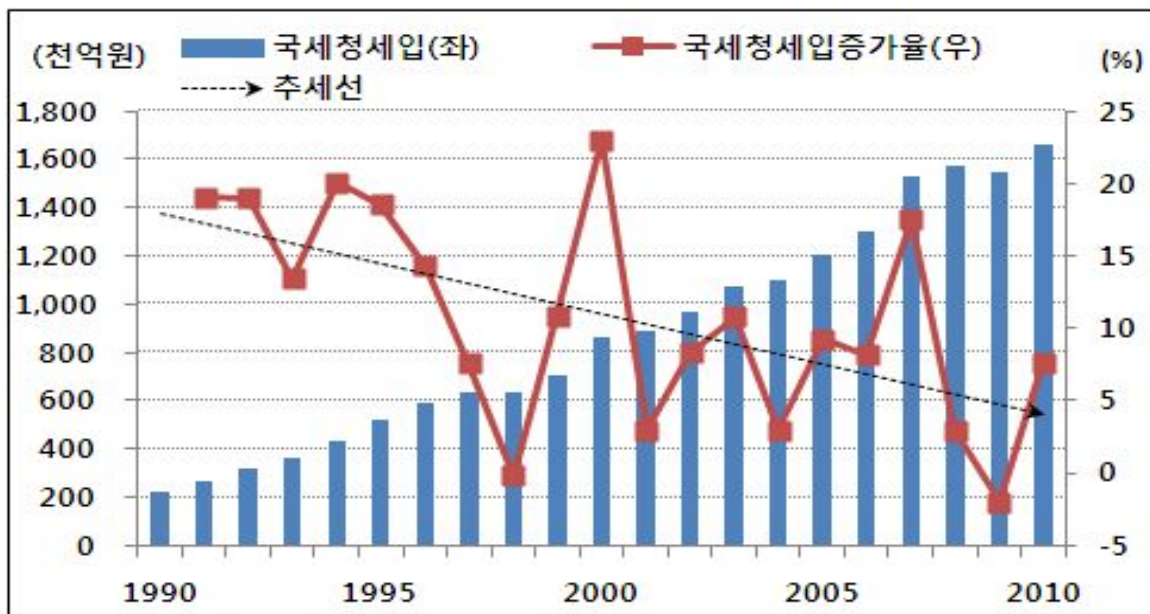
2011년도는 전망치, ()안의 숫자는 GDP 대비 비중(%)

○ (낙관적 세수전망) 총수입증가율 9.5%보다 크게 낮은 총지출증가율 5.5%를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등 균형재정 달성 의지를 보였으나, 내년도 국세수입 증가율 6.8%는 다소 낙관적인 수치임

- 2012년 예산의 특징 중 하나는 '재정준칙'을 강화하여,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천명하고 있음

·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국세수입 증가율과 歲計잉여금도 하락³⁾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2012년 이후 경상GDP증가율 7.5%내외(실질성장률 4.5%)에 기초하여 수립된 총수입 및 국세수입 증가율은 다소 낙관적이라고 판단됨

< 국세청 세입의 규모 및 증가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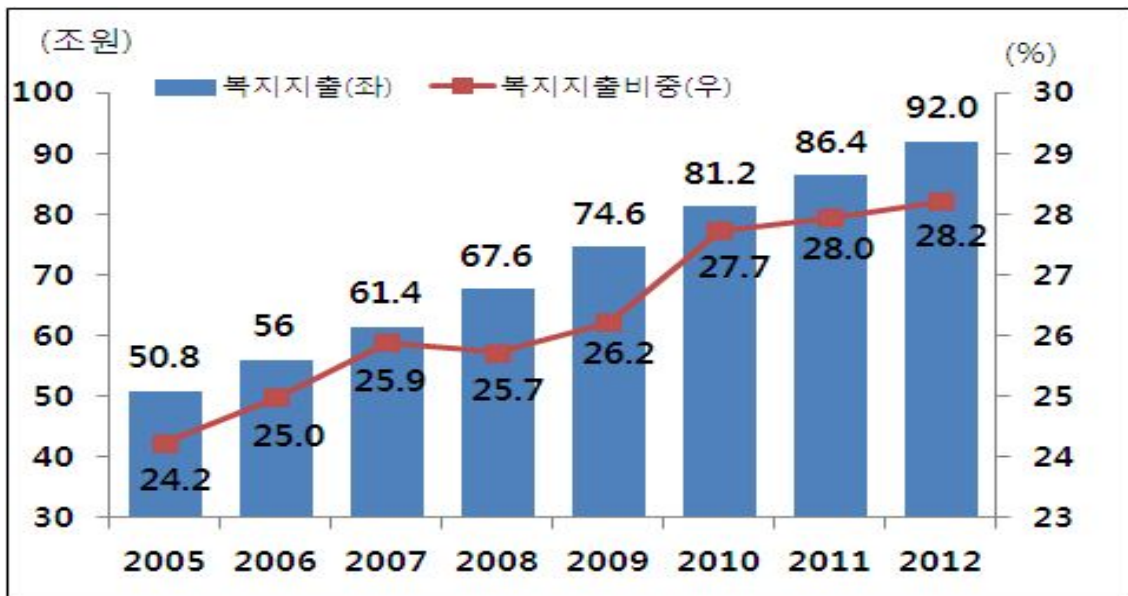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3) 별첨 '세계잉여금 규모 및 증가율 추이' 참고

- 비중이 가장 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올해 세수 전망치보다 9.0%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했으나, 2006년 이후 2011년까지 5년 평균 증가율이 6.5%인 점과 내년도에 예상되는 내수 부진을 감안한다면 다소 낙관적인 가정
 -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실질GDP 성장률을 단순 평균해보면 3.92%밖에 안되며, 2009년의 0.2% 성장률에 대한 기저효과로 2010년도에 6.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제외한다면, 2011년 이후에는 훼손된 성장잠재력 하에서 실질GDP 성장률은 4%정도에 불과할 전망
- (복지예산 비중 30% 근접) MB정부 5년의 복지예산 평균증가율은 8.4%로서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5년 평균 총예산 증가율 6.5%를 상회하고 있으며, 총예산 대비 비중이 30% 수준⁴⁾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음
- MB정부의 복지예산 평균증가율은 8.4%로서 참여정부의 10.1%, DJ정부의 12.5%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총예산 증가율 6.5%보다는 높은 수준임
 - 아래 표와 같이 2005년 기준 복지지출 규모는 50.8조원, 비중은 24.2%였으나, 2012년 각각 92.0조원, 28.2%로 크게 증가하여 30%에 근접하고 있음

< 복지예산 증가 추이 >



자료: 기획재정부

주: 복지지출 비중은 총지출 가운데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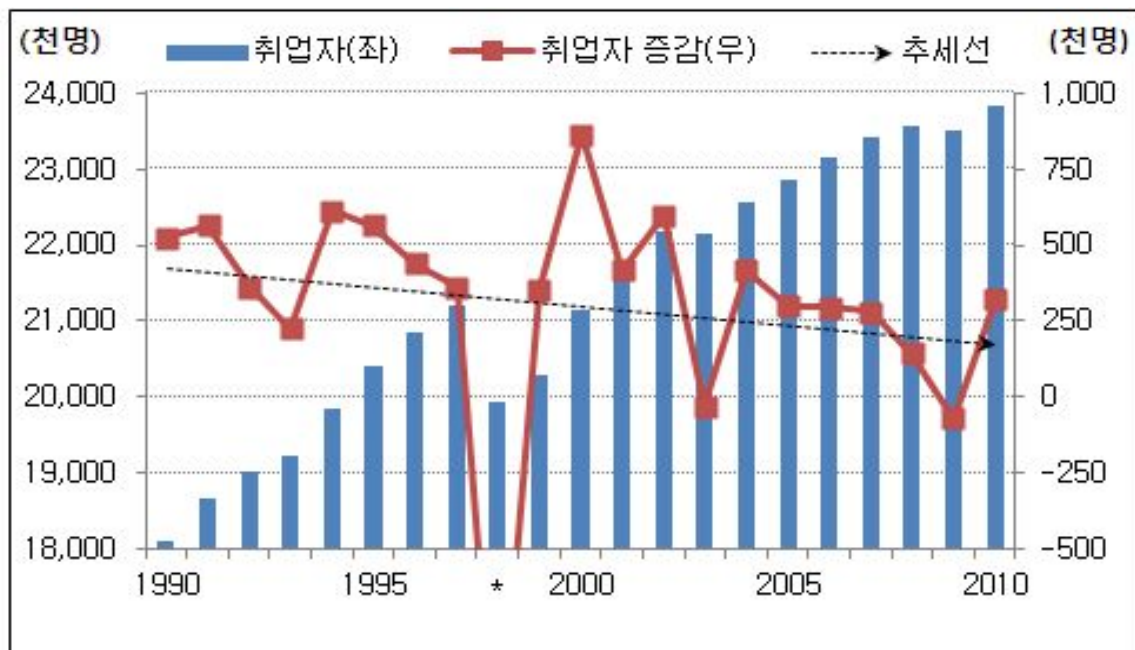
4) 총지출 대비 비중은 30%에 못 미치고 있으나, 중앙정부 통합재정 대비 비중은 2010년부터 30%를 넘어섬.

- 분야별 자원배분 구조를 보면, 1990년대 초까지는 국방분야의 비중이 가장 컸으나, 이후 10여년간 경제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외환위기 이후 복지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2003년부터는 복지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⁵⁾을 차지

○ (일자리 예산의 한계) 2012년 일자리관련 예산은 10.1조 원으로 전년(9.5조 원) 대비 6.8% 증가했다고 하지만, 일자리 예산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음

- 1990년대 초반의 신규 취업자 증가는 연평균 50만 명 선이었으나, 2011년 현재 연평균 20만 명 정도로 크게 떨어져 있는 바, 2.5조원의 재정투입으로 56.2만 명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도 고용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임
- ‘직접 일자리창출’에 배정된 예산과 지원 인원을 보면 큰 변화가 없음
:('10년) 27,270억원(57.9만명)→ ('11년) 23,651억원(54.1만명)→ ('12년) 25,026억원(56.2만명)

< 연도별 취업자 및 취업자 증감 추이 >



자료: 통계청

주: 1998년 취업자 증감은 -127.6만 명. 외환위기의 여파로 취업자가 대폭 감소했음

5)

< 분야별 예산의 비중 추이 >

	1980	1987	1992	1997	2002	2007
국방	30.6	25.5	19.3	13.3	11.6	11.4
경제	26.0	17.7	18.7	24.5	22.6	18.2
복지	9.9	14.3	17.9	17.9	19.9	29.1
교육	14.6	17.1	14.4	16.4	16.5	14.6

자료: 기획재정부, '통합재정수지', 각 년도 / 주: 통합재정규모 대비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

- (국방예산의 높은 증가) 2012년 국방예산은 33.2조 원으로 제출되어 총지출 증가율 5.5%를 상회하고 있으나, 무기 현대화와 전투력 극대화 등 방위력개선을 위한 투자는 계획에 못 미치고 있음
 - 국방예산의 증가율: 이명박정부 기간(2008-2012)에 6.2%로서, 노무현정부의 8.4%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김대중정부의 3.5%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임
 - 총예산 대비 국방예산 비중: 1986년에는 30.1%에 달했으나, 노태우, YS, DJ 정부 기간 계속해서 낮아져, 2002년 이후에는 15%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 국방예산 가운데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0%⁷⁾ 내외에 머물러 있어, 지난 2005년9월 수립된 ‘국방개혁 2020’⁸⁾ 플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방위력개선비 비중(2012년 33.5%)에는 못 미치고 있음

< 방위력개선비 中期계획과 실제 예산 >

(단위: 억 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증가율
방위력개선비 중기 계획	76,768	85,899	94,553	104,315	114,680	10.6
방위력개선비 실제 예산*	76,813	87,140	91,030	96,935	101,350	7.1

자료: 기획재정부, 2008년 중기재정계획;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연도별 예산안 해설 자료

주: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 2012년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3. 재정건전성의 잠재 위협요인

- (잠재적 위협요인들)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은 건전한 편이지만, 최근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르고, 공기업의 잠재적 부채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 위협요인들을 감안하여 재정건전성을 엄격히 관리해야 함
 - ①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국가채무의 추이를 보면, 2001년 121조원에서 2004년에 203조원, 2008년에 308조원, 2011년에는 435조원으로 10년간 4배가량 증가(최근 4년간 100조원 증가)하는 등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빠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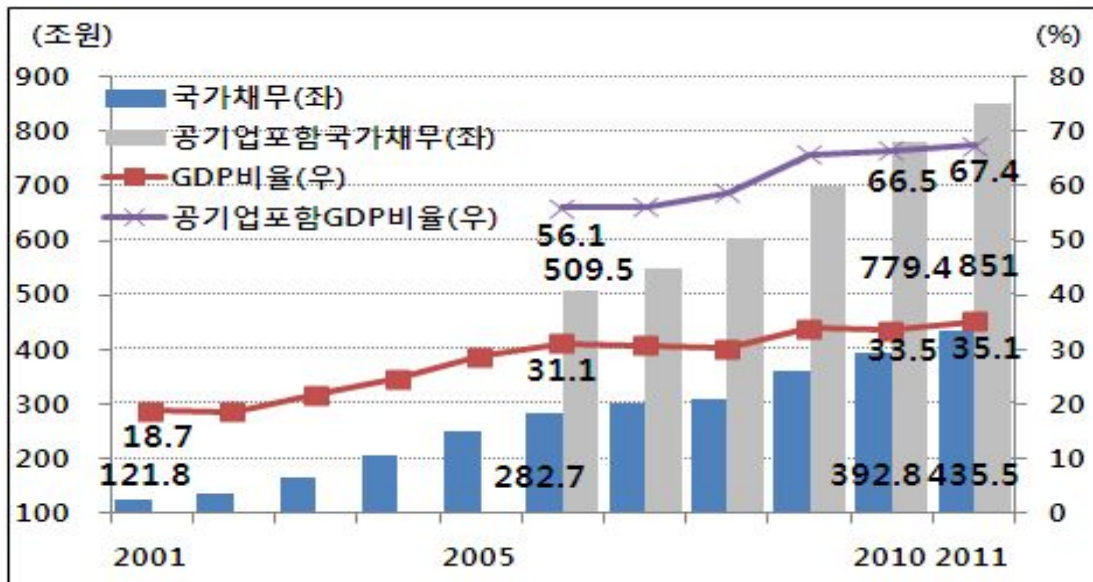
6) 국회 예산정책처, 『2011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2010.11

7) 2010년 30.9%, 2011년 30.9%, 2012년 30.6%.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2010), 기획재정부(2011))

8) 2020년까지 병력위주의 재래식 軍 구조를 정보·지식중심의 질적 구조로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둔 개혁방안으로 2006년 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급증하여 2009년에 역대 최대규모인 -43.2조원(-4.1%)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13년까지 적자가 계속될 전망
-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1년 18.7%에서 2011년 35.1%로 크게 증가할 전망
- ② **공기업부채의 급증:** 공식 국가부채 이외에도 최근 급증한 공기업부채⁹⁾를 포함시킨다면, 광의의 국가채무 비율은 2011년 GDP대비 60%를 넘어설 것임
 -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 주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총부채 규모가 2006년 227조원에서 2010년 387조원으로 4년간 160조원 증가

< 국가채무 규모 및 GDP비율 추이 >



자료: 기획재정부(2010), 국회 예산정책처(2011)
 주: 2011년 공기업 총부채는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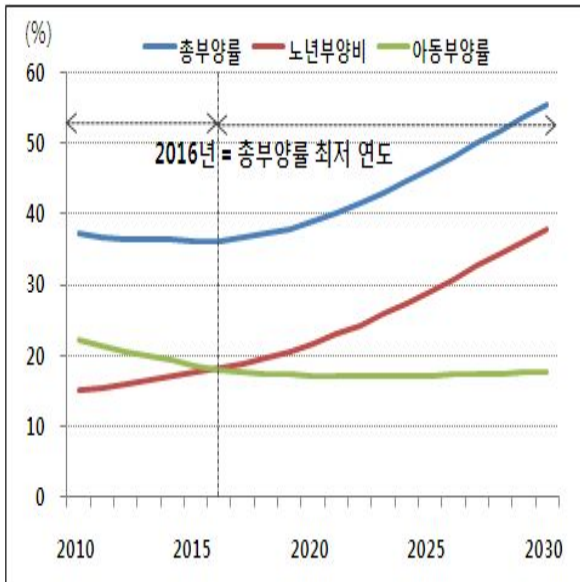
- ③ **빠른 고령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총부양률이 2016년 36.3%의 저점을 찍고 본격 상승할 전망이고, 노년부양비(老年扶養比)도 2010년 15.0%에서 2050년 72.0% 수준으로 크게 높아지면서, 복지지출도 급증할 전망¹⁰⁾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7대 공적 연금/보험의 지출은 2010년 GDP의 6.0%에 불과하지만, 2030년 이후 급증하여 2050년 GDP의 17.8%에 달할 전망

9) 수자원공사에 4대강 공사를 맡기는 등 공기업을 활용하여 정부의 예산외 지출(Off Budget)을 늘리려는 인센티브가 있으므로, 이를 감독·규제할 대책을 마련해야 함

10) 외환위기 이후 사회보험 정비,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제도 확충으로 복지지출 규모가 급증하여 2005년 50.8조원(총지출 대비 24.2%)이었으나, 2011년에는 각각 86.3조원(27.9%)으로 크게 증가함. 아울러,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복지제도의 추가 없이도 고령연금 수급자의 급증을 초래하고, 복지지출의 규모를 급증시킬 것임

- 재정수입을 증대하거나 다른 지출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국가채무는 2010년 GDP의 33.5%에서 2030년 38.0%, 2050년 137.7%로 급증하고, 관리대상수지 적자도 2010년 GDP대비 -1.1%에서 2050년 -8.3%로 증가할 전망

< 빠른 고령화와 총부양률 증가 >



자료: 통계청, 장기인구추계, 2006
 주: 1) 총부양률=[아동(0~14세)+노인(65세~)] / 생산가능인구(15~64세)
 2) 노년부양비=노인인구/생산가능인구

< 중장기 재정전망 >

(GDP 대비 비중%)

	2010	2015	2030	2050
공적 연금보험* 비중	6.0	-	-	17.8
국가채무 비중	33.5	32.3	38.0	137.7
재정수지 적자 비중	-1.1	-0.7	0.1	-8.3

자료: 기획재정부(2011), NABO(2011), IMF(2007)
 주: 1) 2015년은 NABO(2011), 2030년은 IMF(2007)
 2)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3) 재정수지는 '관리대상수지' 기준

4. 시사점 및 과제

- 첫째, 인구 보너스 시기가 끝나는 2020년 이후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복지지출을 포함하는 재정지출의 증가에 대한 규율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함
- 한국은행의 '물가목표제'와 같이 법적 구속력을 지닌, (가칭)'지속가능한 재정목표'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재정준칙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
 - 예를 들어, 유럽연합(EU) 가입조건의 하나인 '재정적자 -3% 이내, 국가채무 60% 이내'를 참고하여 '재정적자 -2% 이내, 국가채무 40% 이내'와 같이 보다 엄격한 재정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재정규율의 강화를 위해 미국의 'PAYGO' 원칙¹¹⁾과 같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법안·사업에 대해 재원 대책을 요구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엄격하게 실시하는 등의 대책도 검토함
- 中期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재정건전성 지표를 미리 관리하고, 국가채무 통계기준을 개선하며, 공기업 부채, 지방 부채 등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잠재요인들을 예측가능하도록 제어하는 등 건전성 관리의 선진화가 필요
 - 2012년에 우리나라의 재정통계 기준을 IMF의 1986년 GFS¹²⁾(현금주의)에서 2001년 GFS(발생주의)로 변경하고, 한국은행 통계와의 불일치를 조정할 경우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 약150조원¹³⁾이 국가채무로 포함될 전망
 -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을 활용하여 정부의 예산 외 지출(Off Budget)을 늘리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줄이기 위해, 재정건전성 지표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더 많이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요건을 엄격히 하는 대책이 필요
 - 지방정부와 관련된 회계 및 기금이 5,000여 개에 달하고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500여 개에 이르므로, 지방채 발행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교부금 지급과 건전성 지표를
-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국세 수입에 대한 전망, 총수입 증가율에 대한 전망도 향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내수 부진을 감안하여, 지금보다 더 보수적인 시나리오에 토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위한 재원조달 대책의 수립과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효율화를 위해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¹⁴⁾의 노력이 필요함
 - (복지재원 확보) 정부지출 중에서 경제/산업 분야 지출을 줄이고 복지 분야 지출을 늘리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증세없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세원 확충을 포함한 다각적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함

11) 'Pay-as-you-go'의 약자로, 미국에서 1993~2002년 시행했던 재정규율의 일종. 의회에서 재정지출이나 감세가 필요한 법안을 발의할 경우 반드시 다른 항목의 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법안에 포함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다시 추진해, 조만간 시행될 예정.

12) IMF에서 규정한 일반정부 회계기준(GFS; Government Finance Standard)으로 국가채무를 산정하는 기준이 됨

13) 재정통계 기준의 변경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규모가 150조원 이상이라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14) 안상훈, '한국형 복지전략, 맞춤형 생활보장으로 전환해야', 선진화포럼 세미나, 2010.11

- 복지지출 이외의 다른 정부지출을 구조조정하고 효율화함으로써 증세 없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각종 조세감면을 최소화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 대책이 필요
 - 늘어나고 있는 건강보험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사적 기금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건강보험기금을 공적 기금으로 전환하여 보다 엄격하게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
 - **(복지서비스 효율화)** 정부재정 가운데 비중이 가장 커진 복지예산의 양적 팽창에 맞춰,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질적 개선이 필요함
 - 구호물품(in-kind) 지급이나 현금지급(cash grant) 중심의 복지에서 벗어나, 수혜자의 선택권을 고려한 상품권 형식의 바우처(Voucher)를 활용하거나, 필요한 생활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서비스 효율화를 추진함
- 셋째, 방위력 증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방예산의 구조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음
- 무기의 첨단화, 기술과 정보 중심의 정예부대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을 늘리고, 경상운영비 중에서도 병력운영비의 비중은 더 과감하게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 위와 같은 국방비 증액의 전제 조건은 육군 위주의 인력구조 문제 등을 해결하여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를 이루고, 국방행정의 효율화를 이룩하는 것임
 - 국방관련 연구개발(R&D) 투자를 7% 이상으로 늘리고, 이를 통해 획득한 우주항공, 조선, IT, 신소재 등의 국방부문 최첨단 기술을 新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보다 강조되어야 함.

수석연구위원 김동열 (2072-6213, dykim@hri.co.kr)

<별첨> 歲計잉여금 규모 및 처리내역 추이

(단위 : 억 원)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처리 내역			
		채무 상환	세입 이입	추경 자원	교부금 정산
1992	7,022	997	6,025	-	-
1993	5,548	5,548	-	-	-
1994	13,062	13,062	-	-	-
1995	4,065	1,000	-	3,065	-
1996	7,187	-	-	7,187	-
1997	4,147	-	4,147	-	-
1998	6,202	-	-	6,202	-
1999	23,724	16,098	3	7,623	-
2000	40,555	-	-	40,555	-
2001	24,074	-	18,693	5,381	-
2002	32,861	-	18,693	14,168	-
2003	11,262	-	-	11,262	-
2004	1,726	-	-	1,726	-
2005	12,367	3,818	-	8,549	-
2006	13,728	-	-	-	13,728
2007	153,428	50,640	48,655	-	54,133
2008	45,763	21,836	-	20,980	2,947
2009	36,087	14,394	13,829	-	7,864

자료: 기획재정부(www.mosf.go.kr)